

“지역경제 살리자” 광주시 공무원들 힘 모은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12·3 계엄·탄핵 사태'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구내식당 휴무, 릴레이 소비촉진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십시일반 힘을 모으고 소비 진작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에 오는 24일과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근 식당 이용하는 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날은 점심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민생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서다.

광주시에 기존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내식당 주 2회(수·금) 석식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등 주요 기관·단체 등과 함께 한다.

광주시에 오는 24일 송정역에서 릴레이 캠페인 첫 주자로 나선다. 이후 전통 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에서 5개 자치구, 공공기관 등이 분위기를 이어간다.

캠페인에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소비자단체 회원들도 참여한다.



광주시에 최근 5개 자치구, 광주은행과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시청 구내식당 휴무·상생카드 할인율 10% 확대

릴레이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민생 안정 방점

다. 내수경기 침체 속에 예기치 못한 비

상정국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의 어려움을 알리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운동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공공배달앱 및 상생카드 이용하기 운동도 병행한다.

지역 내 소비 진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연말연시 소규모 행사·모임 시 소상공인 식당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전통

시장 장보기·지역 상점가 제품 구입하 기 등에 나선다.

광주시에 감기정 시장이 행정 최우선 과제로 민생 안정을 주문함에 따라 집행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5개 자치구와 예산 100억원을 긴급 투입, 2025년 1월 한달간 상생카드 할인율을 10% 확대 시행한다.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광주공공배달앱 연말 특별 할인 프로모션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울러 정부와 국회에 조기 추경과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은 민생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아 달라"며 "광주시에 민생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해상풍력·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남 현안 건의

김지사, 국회 방문 1천185억 긴급 민생경제 대책 협조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해상풍력과 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1천185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전현희 국회의원을 만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에너지고속도로 등 지역 핵심 현안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에 대해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100(RE100)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요건을 갖춘 신안 해상풍력 단지가 집적화단지로 조속히 지정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와 관련, 김 지사는 "전남도가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력 공급 문제로 신규 투자가 지연되거나 임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과 변전소 35

kV급 변전소 2곳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리적 인접성 기준이 아닌 전력 자급을 기준으로 따라 전기요금이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최대 20% 전기요금 할인 특례 부여를 제안했다.

특히 계엄 선포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과 관련,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는 총 1천185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소개하고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주문했다. /양시원 기자

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 1억5천만원 모금

전남도가 지난 11월 한 달간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기부자는 1천447명, 모금액 1억5천2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이벤트 기간에만 올해 모금 목표액의 15%를 달

성했다. 이벤트는 전남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을 주문·수령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2만원 상당의 전남 햅쌀(나누우리쌀·

왕건이탐낸쌀·황토랑쌀·나비쌀·수호천사건강미)을 추가 증정한 행사다. 많은 기부자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연말정산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맞춰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전남 쌀 소비를 촉진했다. /양시원 기자

“대법 통상임금 판결 대책 마련 시급”

채은지 시의원 “市, 지역 산업현장 혼란 완화 나서야”

최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지역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22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해 지역 산업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특히 광주시 산하기관과 지역 제조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에 기업들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을 파악해 인건비



예산을 새로 수립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또 “인건비 증가에 대비해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자동화 시스템, 원격 근무 활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채 의원은 “기업의 경영 악화, 노사 간 갈등 및 현장 혼란 문제를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안전문화대상’ 첫 수상

행안부 주관 평가...특별교부세 1억원 확보

전남도는 22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안전문화대상을 사상 최초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부문에서 수상한 전남도는 인센티브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

이기 시작 성공 추진, 교통안전문화 범도민 확산 안전 1번지 전남 실현’을 주제로 응모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민선 7·8기 핵심 사업으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남협의회와 함께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역점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민선 7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성공에 이어, 민선 8기에도 9월 말 기준 역대 최소 사망자를 기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미순 안전정책과장은 “안전문화대상 수상은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 결과”라며 “도민 안전이 최상의 복지라는 목표로 도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알고당사다

개인형이동장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